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소고 Note on a solution of the Culture and Arts policy

김영란(예원예술대학교)

차 례

1. 문화예술정책의 추진배경
2. 문화예술정책의 변천과정
3. 문화예술정책의 특성
4. 문화예술정책의 관한 제언

■ keyword : | Culture, Arts, Culture & Arts Policy |

1. 문화예술정책의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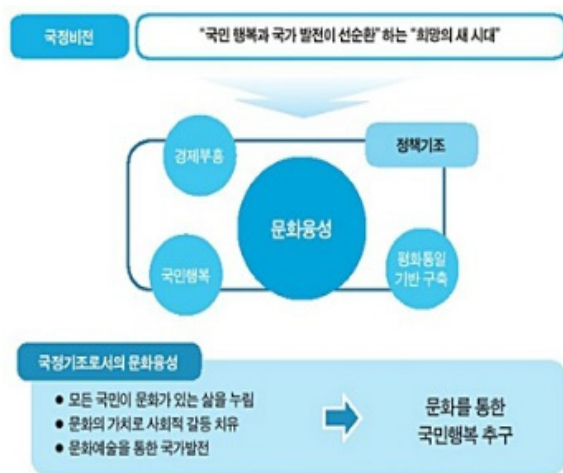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표재순)가 2016년 4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셀(cel) 스테이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융성위의 활동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5년 12월 11일 출범한 제2기 융성위가 그동안 다양한 활동과 토의를 거쳐 발굴한 핵심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발표하는 자리를 가진바 있다[1].

이 자리에서 표재순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문화를 찾고, 쉬어, 행복을 나눈다’라는 제2기 위원회의 활동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마을을 문화로 다시 살리기’와 ‘타 부처 사업에 문화의 옷 입히기’, ‘세대별 문화 향유 확산하기’ 등 문화융성을 확산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했다. 같은 맥락에서 융성위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문화의 진흥 등을 위해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2기 융성위는 전체회의 외에도 ‘전통문화, 문화융합, 문화향유’ 등 3개의 분과위 활동과 워크숍, 자문회의,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융성 정책과제를 도출해 왔다[2].

이미 박근혜 정부는 국정 철학으로 ‘국민행복’,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문화를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며 문화가 있는 삶,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달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문화융성은 문화 창조 및 보존, 문화생활, 문화 활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 창작의 활성화, 문화복지,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 및 본질을 중시하고 있다[3].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 하는 희망의 새 시대로 천명한바 있다. 이는 국가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연계되며, 이는 국민 화합과 국가 번영이라는 포괄적 조화를 통한 안정된 국정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국정비전에 따른 정책기조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 문화융성’ 등이 제시된바 있다. 이는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서 문화융성이라는 문화 정책이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 그리고 국가 복지에 중용한 영역으로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정부 정책기조로서 문화융성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문화융성’이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며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발전하는 것을 의미 한다. 두 번째는 ‘문화를 통한 융성’이다. 이는 문화의 융성이 사회 다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문화의 속성인 창조성과 다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문화 외의 여러 영역에 자극이 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융성의 시대란 단순히 문화가 융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의 다른 분야까지 발전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4]. 이와 관련한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가조로서의 문화융성의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정부의 국정비전과 문화융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문화예술정책백서. p. 5.

정부의 정책기조로 천명된 문화융성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국정비전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것뿐 아니라, 문화를 통해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성장 속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미뤄졌던 문화의 가치를 복원하여 지역, 세대, 계층 간 격차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의 시대라 밝히며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사치 있는 삶, 또한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문화국가 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문화융성’이라는 이름아래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동반하고 있다[4].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발전에 부합되며,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재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갖는 산업적 가치와 국민 및 사회 통합적 가치를 고려하면 미래사회에서는 그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문화예술정책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별도의 명칭을 지닌 정책이 존재하기보다는 문화정책, 예술정책에 포함되거나, 정부의 주요 부처에서 예술교육, 문화예술 활동, 문화

예술 지원 등과 관련된 방안이나 법령을 발표함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5].

위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공급자, 즉 예술 창작자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의 비중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은 1980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정부 문서에 등장한 것은 2003년 7월 「지역사회문화 기반시설과 학교 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의 제안서였고, 이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확대되면서 공식적인 정책 용어로서 사용되었다[4].

이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2004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창의 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 「예술의 힘: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2004-2008)」을 통해 활성화되었다[6]. 특히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11월 25일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사, 학계 전문가, 문화기반시설 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 학교와 지역 공공시설 등 사회 전반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5년에 이르러 문화예술교육 부문 정책사업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확정하였다[7].

위와 같은 문화예술정책을 대변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이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3년이였다. 당시 문화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위해 우선적으로 교육부와와의 접촉을 시작했고, 2003년 7월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양 부처 공동으로 상정하게 되었다[7].

2004년 1월에도 문화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중간보고 및 04년 추진계획」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부문 정책사업의 영역을 구체화하여 확장시켰다. 2004년 11월에는 문화부 예술국 내에 정식으로 문화예술교육과가 설치되었고, 2005년 2월에는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실행과 평가 그리고 각역할 주체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치되었다[8].

2007년에는 정책사업 실행 초기 3년의 경험과 시행착오, 정책현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증장기 전략(2007-2011)」을 수립하게 되

있으며, 2008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의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2009년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사업 강화가 있다. 양 부처 간 협력과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16개 시·도의 92개 시설에서 아동·청소년 1,253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다[4].

2010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 계획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의 분야가 확대되어 기존에 5개 분야에서 전통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가 추가되어 총 8개 분야로 확대 개편되어 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중에서 국악은 음악으로, 연극은 국어로, 무용은 체육으로 편입되어 기본교과로 시행될 수 있었다. 각 교육과정의 선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상황에 따라 차등되어 결정되었다[7].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 복지와 교육목적의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행하기 위한 지침이며, 이러한 지침에서 선택된 행동방안을 달성 또는 집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단일 결정 또는 결정의 집합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기존의 정책처럼 공공지원 정책과 민간지원 정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지원 정책과 민간지원 정책이 융합된 것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수요자의 공급자에 대한 정책이라 하겠다[6].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정책은 ‘문화 복지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이 점차 예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 소비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예술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정책과 접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다[9].

3. 문화예술정책의 특성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참여 프로그램 증가, 인지도 및 참여율 상승 등 국민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 만족도(‘15.8월 80.4%), 국민 인지도(‘14.1월

19% → ‘15.8월 45.2%), 참여율(‘14.11월 28.7% → ‘15.8월 37.2%), 참여 기업(‘14.11월 37개 → ‘15.12월 86개)[10] 등에서 보다 향상된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행복을 이끌어가는 문화융성의 다양한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는 시점이다. 나아가서 향후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인한 개인 가처분 시간 증가로 문화예술정책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리라 판단된다.

정부는 문화예술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과제[4]를 제시한바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문화기본법 제정 및 문화재정 2% 달성’이다. 지금까지 제정된 문화 관련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 중에서도 특정 영역에 한정된 법들이었다. 이러한 법제로는 국정 운영 및 사회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장시키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실효적 정책수단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문화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융성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재정 중 문화재정 비중을 2%로 확대하여 문화융성의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참여의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이다. 이는 경제 위기, 재정 압박의 시대 속에서 최소한의 문화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 복지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연령, 소득, 거주지역 등에 따른 문화 향유의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문화와 예술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이다. 글로벌·다문화 환경 속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함과 동시에 국제 문화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세계인이 즐기는 한국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문화원 등을 통한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나아가 남북 문화교류확대를 통해 한반도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인 ‘생활문화공간 조성’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의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거, 공원 녹지, 하천 등 생태휴식 공간 확대 및 일상 생활여건 개

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한 문화융성 3대 전략과 10대 과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융성 3대전략과 10대 과제 내용

전략	과 제	내 용
문화 참여 확대	문화제정 2%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창작 기반 마련, 콘텐츠 및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제정의 비중을 2%로 늘리기로 함 - 문화융성과 문화국가실현의 토대인 문화기본법 제정추진
	문화 참여의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향유의 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연계된 각종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고무 - 남북한의 문화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추진 - 한국문화의 전문적인 해외 홍보 강화
	생활문화공간 조성	- 도심생태휴식공간 조성 및 생태공간의 생태적 건강성의 복원 추진 - 산책용 길, 휴식 문화공간, 놀이터, 도서관 등 기초 생활인프라에 대한 지원 추진 - 도심지 주거 생활환경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문화 예술 진흥	예술인의 창작안정망 구축 및 지원강화	- 예술인 복지 및 확충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순수예술 및 비주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창작지원 시행 - 문화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제도의 도입 유도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확대	-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조치 추진 - 국립한글박물관 조성 및 아리랑의 날 제정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 한국형 인문정신문화 진작 및 한국의 정신적 가치 진흥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정신문화포럼 설치 및 정례회 등 정신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관련 부처 간의 노력
문화와 산업 융합	한국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	-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 지원 및 콘텐츠코리아랩 설치 - 창의 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설치 및 문화콘텐츠 투융자 확대 -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문화기술 기획평가시스템 제도 강화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 마이스 산업 및 다양한 관광산업의 개발과 운영지원 - 국제 관광협력 강화 및 ODA 확대 도모 - 외국인관광객 출입국 편의 지원 실시 계획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 공공스포츠클럽의 문화법인화 도모 - 체육인복지 강화 및 안정적인 스포츠 일자리 창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문화예술정책백서. pp. 7-8.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곧 지식,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대두되는 시대를 의미하며, 문화의 발전이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이다. 또한 문화 수요 측면에서 현대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11].

이와 관련하여 정광렬[12]은 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경제학적 관점, 정치·행정학적 관점, 재정학적 관점의 3가지 관점에서 당위성을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공연예술은 그 속성상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만 작동되면 자칫 상업주의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 보존·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쇠퇴하여 사회적 총 효용이 감소하고,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논리이다.

둘째, 정치·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은 헌법에 근거하여 문화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민족문화 발전, 예술지원을 통한 창조력 증진,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통한 국민복지 증진, 문화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발전, 정체성·사회규범증진을 통한 공동체 유지 등 5가지로 나누어진다.

셋째, 재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형평성과 가치재로서의 당위성을 가진다.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관점인데,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최소한의 예술의 소비를 통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아야 하며, 가격이나 소득, 교육수준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기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지향형으로의 전환, 창작자 중심에서 국민문화생활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 문화의 사회적 가치 중심에서 문화의 정신적 가치(정체성 제고) 및 글로벌 가치 강화를 추구,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이양 및 상호협력 강화, 시장실패에 근거한 보전과 균형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전략적 지원과 파급효과 중심의 지원정책 전환, 일반 관객 확대정책 중심에서 소외 계층 문화복지확대 정책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시대적 흐름과 국내 문화 예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요구된다[11].

위와 같은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정책의 기조에 나타난 특징들과 관련하여 최윤영(2011)은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지향형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둘째, 창작자 중심에서 국민문화생활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문화의 사회적 가치 중심에서 문화의 정신적 가치(정체성 제고) 및 글로벌 가치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넷째,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이양 및 상호 협력 강화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시장 실패에 근거한 보전과 균형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전략적 지원과 과급효과 중심의 지원정책 전환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일반 관객 확대정책 중심에서 소외 계층 문화복지 확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11].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정책은 ‘문화 복지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9]. 이처럼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문화예술정책의 특성과 당위성으로도 재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4.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제언

전술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정책은 ‘문화 융성’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중요한 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는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복지적 차원에서의 극대화된 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및 사회 통합·발전에 이바지함을 필요성 및 당위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정책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향유권 확대를 지향하며, 나아가서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방면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영역일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정책은 대중문화예술의 가치 확산과 국민의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추진 정책이 요청된다. 둘째, 문화예술정책은 산업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산업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산업적 기반 구축이 요청된다. 셋째, 문화예술정책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과 홍보, 그리고 전문가 양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 입안 추진이 요청된다. 넷째, 문화예술정책의 지속가

능한 정책기조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학술적 연구 활성화 기반조성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는 한 국가의 선진화와 복지화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로서 작용할 것이다. 즉, 문화예술정책이 국민 삶과 사회 통합, 그리고 국가 발전에 중요한 경쟁력을 갖는 필수요소로서 인식하는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머니투데이, 문화융성위 새 화두, ‘문화를 섞어, 행복을 나누다’, 2016.4.11.
- [2] 이선진, 생활문화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웰빙코리아뉴스, 2016.4.11.
- [3] 임학순, 채경진, 새 정부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3.
- [4]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5] 임학순,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1998-2007), 문화정책논총, 21, 2009.
- [6] 황연주, 정연희, 문화예술정책의 분석과 전망, 미술교육논총, 18(3), 2004.
- [7] 홍애령, 송미숙, 문화예술교육 정책설명회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설명회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 [9] 최혜자,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모색 : 허버트 리드의 예술을 통한 교육 비판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4, 2010.
- [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을 위한 국민행복 창조경제 실현, 2016.
- [11] 최윤영, 순수 공연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한무용학회 제68권, 2011.
- [12] 정광렬,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저자소개

● 김 영 란(YoungRan Kim)



- 2009년 2월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학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예원예술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한국(실용)무용, 남북한문화예술정책